

'묻지마 살인' 해마다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163건 발생... '현실 불만' 이 4분의 1 차지

최근 강남역 인근 상가에서 일어난 20대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묻지마 살인'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직장인 A(23·여)씨는 '묻지마 살인'의 표적이 돼 청춘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피의자 김모(34)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밝혀진 피의자가 범행 대상을 찾아 화장

실 앞을 서성이든 CCTV 화면이 전파를 타면서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된 20대 여성의 안타까운 비보는 세상 여론을 들끓게 했다.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세대에 이제 묻지마 범죄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김모(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모(65)씨도 마찬가지다. 승터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이씨

가 '운 나쁘게' 김씨의 눈에 띄었을 뿐이다. 당시 산을 배회하며 등산객들을 흉기로 위협했던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무참하게 죽였다.

이같은 묻지마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163건에 달한다.

범죄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이 24%였다. 4건 중 1건 꼴이다. 정신질환

(36%)과 알코올·약물 중독(35%)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95%에 달한다.

경찰청의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는 분노 조절 실패 범행 피해자의 15%가 피의자와 면식관계(얼굴을 서로 알 정도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행 장소도 전체 61.9%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였다. 범행 수법도 포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훈련장에서 동료 예비군 3명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비군 최모(24)씨나, 살인을 저지르고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일곤(49)씨가 대표적이다.

/안진수 기자



우리 아가 잘 놀고 있나 부부의 날(21일)과 UNO1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22일)을 앞둔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로스트밸리에 살고 있는 일락꼬리여우원숭이 가족이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차된 차량서 물건 훔친 20대 검거

경찰 수사를 따돌리고 1년 가까이 따돌리고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 부수고 물건을 훔쳐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0일 원룸과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4시 15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순 뒤 태블릿 PC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심야시간을 노려 총 33회에 걸쳐 노트북, 휴대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 전 인근 원룸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놓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진수 기자

전북경찰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지난 19일 순천완주 선 상관통게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동으로 대형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불법 개조로 발생할 수 있는 전복사고, 적재물 낙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됐으며 불법 개조 화물차량 9대를 적발하고 운전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고순대 제9지구대 방홍 대장은 "대형 화물차량이 적재물을 많이 싣기 위해 적재함을 개조하거나 보조를 부착한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진수 기자

의약품업체 불법 리베이트 받은 전주 J병원 이사장 구속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전주 J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20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 6곳으로부터 18억여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주 J병원 이사장 A(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47)씨 등 6곳의 업체 대표로부터 18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괜한 기대했다"… 옥시 대표 만난 피해자들 실망

기대를 안고 옥시 한국법인 대표와 만난 옥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실망만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20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아드리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옥시 가슴기살균제 사태 관련 사과'의 장은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는 가슴기 살균기 피해자 유가족연대의 피해자 70~80여 명과 옥시레킷벤키저 아타 올라사드 사프달 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들은 옥시 가슴기살균제로 1~2등급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결을 더 나아가 옥시 측이 구체적인 사과와 보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괜한 기대를 한 것 같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옥시 살균제에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유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가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느끼기에 그저 기술적으로 답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회피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날 만남의 의미를 낮게 평가했다.

최승은 대표도 모임이 끝난 뒤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가족들을 대표해 실망감을 전했다. /박용주 기자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가능성에 반발

도내 시민사회단체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 아니다" 비판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전북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전북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각 시도 교육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조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시는 다른 사안과 달리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감들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박탈당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이미 3차례의 징계위를 열었지만 징계 대상인 전교조 전임자들은 지난 1·2차와 같이 이번 3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3차 징계위는 공립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인사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 대전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해고는 징계위 의결과 인사위 결정, 교육감 결재로 확정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일부 교육 NGO단체들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0일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민주시민의 진보교육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 30여명은 "김 교육감은 '해고는 살인이다'고 누누이 외치며 우리와 어깨 곁고 당당히 정권과 투쟁하자고 했던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법외노조의 전임유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교조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김 교육감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로 더 이상 민주시민의 진보교육감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적어도 교육의 수장이라면 소속 교직원들의 해고를 막고 나아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징계위에 재의를 요구하라"며 "또 우리 민주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능하고 폭압적인 정권과 당당히 맞서는 것만이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홍삼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항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